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34호 (2023-2)
발행일 2023. 4. 10.
ISSN 2092-7117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주요 현안과 과제¹⁾

장인수

인구정책기획단 부연구위원

- 최근 지역 차원의 저출산 정책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과 검토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이해됨. 이에 이 글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현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함.
- 광역지자체 관련 집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현안을 제시함. 즉, 저출산 집계변수(지표)의 종단적 변화가 상이한 경우가 관찰됨.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역지자체 내 관찰 지역별 현황에서는 편차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에서의 지역 간 경쟁에 따라 정책 비효율과 재정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 상기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광역지자체별 정책 수혜와 관련된 통계 생산 및 관리,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공공보육 관련 지원 특례 개선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가능성 고려, 출산지원금 재정에 대한 차등적 보조금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함.

0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양상에 대한 전 국가적 정책 대응 외에 지역 차원 정책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은 지역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세부 사업을 담고 있음(표 1).

1) 이 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장인수, 정찬우(2022a),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발간예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 재구성해 작성한 것임.

- 저출산 정책을 국가뿐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 추진 및 평가 관련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과 검토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이해됨.
 - 그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저출산 관련 인구 동태에 대한 심층적 분석, 현안 검토, 정교한 평가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였음.
 - 또한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공통 사업 중심 정책 추진, 자체 사업 추진 여건 악화, 공통 사업 추진을 위한 매칭의 어려움 등이 당면 과제로 인식되어 왔음.

〈표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내 지역 인구 변화 대응 세부 사업

구분	(추진 전략)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세부 과제	4-1-가. 청년의 지역 자립 지원
	4-1-나. 귀향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정착 지원
	4-2-가. 지역 밀착형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
	4-2-나. 인근 생활권 피해화 방지
	4-2-다.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분석 인프라 조성
	4-3-가.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4-3-나. 선별적 지원 강화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basicPlanDetail.do?articleId=106&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에서 2021. 10. 21.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장인수, 정찬우(2022a)에서 재인용함.

- 저출산 대응 정책의 추진 주체로서 중앙정부와 지역이 공유하고 인식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현안을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특히 광역지자체는 지자체 시행계획 정책 추진 주체 외에도 중앙-기초 간 정책 소통의 매개, 관할 기초지자체 정책 조율 및 관리의 주체 등 다양한 특성을 복합적으로 띠고 있음.
-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체계에서 중앙-광역-기초의 유기적 정책 추진 체계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과도 맞물려 있음.
- 이 글에서는 광역지자체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인구 모니터링, 보육 지원, 출산 지원 세 분야에서 정책 현안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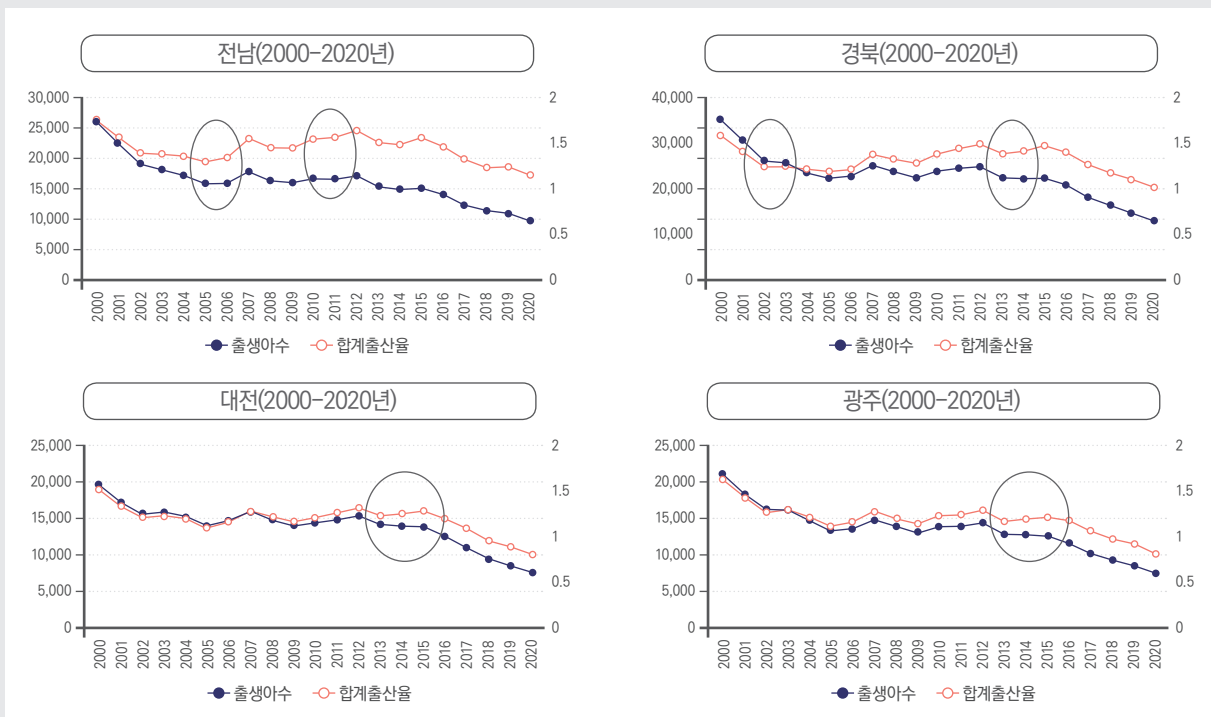
0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

1) 정책 평가 및 인구 동태 모니터링 관련

◆ 저출산 정책 평가에 활용하는 집계 자료별로 상이한 특성

-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경험적으로 빈번하게 활용하는 집계지표에는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이 있음.
 - 이 중 합계출산율은 장인수(2021)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지역 인구 동태와 맞물려 있어 실제 출생아 수와 상이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 인구 동태, 특히 출산 관련 지역 인구 동태를 관측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그림 1]은 2000~2020년 기간의 광역지자체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의 추세를 보여 줌. 이 기간에 두 집계변수는 일시적인 등락을 반복하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실제 출생아 수 변화와 합계출산율 변화가 상이한 지점이 관측됨.
 - 예를 들어 전남, 경북, 대전, 광주 지역의 특정 기간에는 출생아 수는 감소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로 합계출산율이 특정 지역 내 15~49세 여성 수에 따라 상이할 개연성이 높음. 상기 지역에서 해당 기간에 합계출산율이 증가해도 15~49세 여성의 사회적 이동에 따라 출생아 수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임.

[그림 1]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증감 비교(불일치) 사례



주: 지역별 그림의 왼쪽 축은 출생아 수를, 오른쪽 축은 합계출산율을 각각 의미함. 지역별 해당 원 표시는 두 지표가 서로 상이한 방향(예를 들어, 합계출산율은 증가하지만 출생아 수는 감소함)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줌.

자료: 통계청 집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장인수, 정찬우(2022a)에서 재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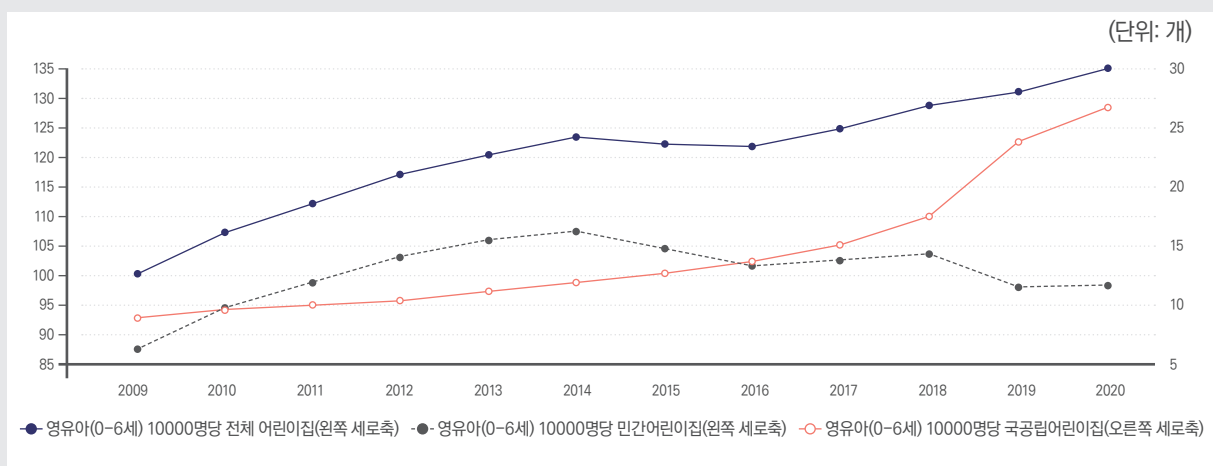
- 따라서 이 기간 합계출산율을 저출산 대응 정책의 평가 지표로 활용하였다면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생아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정책 성과를 오판할 가능성이 있음.
- 이를 사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는 것과 병행해 미시적 측면의 인구 동태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함.

2) 보육 정책 관련

◆ 지역별 영유아 인구 대비 어린이집 수와 이용률의 편중

-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증가 양상은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년)(보건복지부, 2017)의 보육 공공성 강화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 기본계획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 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 지원 확대의 4개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음. 특히 보육의 공공성 강화 범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574개 확충을 목표로 하였음.
 - 국공립어린이집은 2017~2021년에 2,300여 개 증가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증가 국면을 지역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는 전 국가적 최저선(최소 수준 보장, national minimum) 보장이라는 정책 기조(기획재정부, 2019)를 고려할 때,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최소 동일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는 논의가 실현되고 있는지와도 맞물려 있음.

[그림 2] 영유아(0~6세) 1만 명당 전체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 수



자료: 통계청 집계 자료;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집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장인수, 정찬우(2022a)에서 재인용함.

- 구체적으로, 2009~2020년 228개 시·군·구의 영유아 인구(0~6세) 1만 명당 어린이집 수의 추세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관측되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즉, 영유아 인구(0~6세) 1만 명당 전체 어린이집 수는 2009년 100.2개, 2015년 122.1개, 2020년 134.6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도권은 관측 기간 평균 130.85개, 비수도권은 115.76개로 평균 약 15.09개 차이가 있음. 이러한 두 권역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국공립어린이집 수 역시 2009년 8.9개에서 2020년 26.4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역 간 차이는 약 2.8개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영유아 인구(0~6세) 1만 명당 전체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수의 차이가 관측 시작 연도인 2009년에 비해 2020년에 더욱 심화됨.
 - 구체적으로, 2009년 영유아 인구(0~6세) 1만 명당 전체 어린이집 수는 수도권 평균 107.6개, 비수도권 평균 97.1개로 약 10.5개 차이,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수도권 9.1개, 비수도권 8.7개로 평균 약 0.4개 차이가 관측되었으나, 2020년에는 전자는 수도권 143.9개, 비수도권 130.8개로 약 13.1개 차이, 후자는 수도권 30.8개, 비수도권 24.6개로 약 6.2개 차이가 나타남.

〈표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영유아 1만 명당 어린이집 수 평균의 차이

(단위: 개)

영유아 1만 명당 전체 어린이집 수						
권역 구분	관측치 수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t-statistic	p-value
수도권	792	130.85	1.07	30.28	10.8084	0.0000
비수도권	1944	115.76	0.77	34.21		

영유아 1만 명당 국공립어린이집 수						
권역 구분	관측치 수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t-statistic	p-value
수도권	792	16.19	.52	14.89	4.6399	0.0000
비수도권	1944	13.41	.31	13.92		

영유아 1만 명당 민간어린이집 수						
권역 구분	관측치 수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t-statistic	p-value
수도권	792	106.31	1.26	35.48	8.3912	0.0000
비수도권	1944	97.91	4.69	206.89		

자료: 통계청 집계 자료;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집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장인수, 정찬우(2022a)에서 재인용함.

〈표 3〉 2009년, 2020년의 영유아 1만 명당 전체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의 권역별 평균 어린이집 수 차이

(단위: 개)

구분	2009년			2020년		
	전체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전체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수도권	107.6	9.1	92.40	143.9	30.8	100.96
비수도권	97.1	8.7	85.69	130.8	24.6	96.83
차이	10.5	0.4	6.71	13.1	6.2	4.13
t-statistic	2.6803	0.3542	0.3101	3.3619	2.2454	0.1452
p-value	0.0079	0.7235	0.7568	0.0009	0.0257	0.8847

자료: 통계청 집계 자료;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집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장인수, 정찬우(2022a)에서 재인용함.

3) 출산지원금 관련

◆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추진의 비효율성과 재정 부담 가중

-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정책이 인접 지역 간(특히 지역 인구 감소를 경험하는 인구 위기 지역) 인구 유입 경쟁에 따른 비효율성을 유발한다는 논의(박진경, 2019)가 있음. 이러한 논의와 지역별 현황을 바탕으로 광역지자체 수준(차원)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출산지원금 정책은 지역 주도적 저출산 대응 및 인구 감소 대응 정책으로 이해되며, 2020년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219곳(96.9%)에서(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20), 2021년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222곳(98.2%)에서(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21)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더 구체적으로, 2021년 기준 17개 광역지자체별 기초지자체의 출산지원금 평균은 대체로 인구 규모 감소 및 인구의 (초)고령화, 젊은층의 사회적 감소 등으로 표현되는 소위 인구 위기를 경험하는 지역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인구 1만 명당 출산지원금 수혜자 수 역시 동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기초지자체 간 격차가(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총지출예산의 평균치도 인구 위기 지역이 대체로 더 높았으며 그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남.
 - 2020년에 비해 2021년의 단위 인구당 출산지원금 수혜자 수는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크고 인구 밀도가 높은 광역시 지역이 광역도 지역에 비해 증가폭이 더 큰 반면, 출산지원금 평균 수혜 금액의 증가폭은 반대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점, 출산지원금 총지출예산은 인구 감소가 심화된 광역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증가 양상이 관측되고 있는 점도 출산지원금 관련 재정 여건의 악화 및 지출의 비효율성을 보여 줌.
 - 이러한 경향은 출산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인구 위기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좀 더 차등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표 4〉 17개 시·도 인구(1만 명) 대비 출산지원금 수혜자 수, 총지출예산(2021년)

(단위: 명, 백만 원)

지역	기초 지자체 수	인구(1만 명) 대비 출산지원금 수혜자 수				출산지원금 총지출예산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서울	25	51.70	13.76	4.11	81.61	689.18	385.97	274	1900
부산	16	33.43	14.84	9.13	57.94	286.08	186.08	88	670
대구	8	26.39	32.31	0.00	88.41	336.38	711.77	0	2081
인천	10	38.04	22.26	6.48	78.46	1155.47	1045.45	41	3500
광주	5	14.36	11.72	3.42	31.63	103.36	62.45	40.8	177
대전	5	23.78	19.06	0.00	43.26	111.00	118.64	0	300
울산	5	64.04	16.49	50.43	91.58	1246.60	921.67	414	2704
세종	1	91.76	-	91.76	91.76	4000.00	.	4000	4000
경기	31	58.61	33.43	6.24	159.55	1838.39	1491.46	240	5950
강원	18	107.98	113.12	24.59	486.48	495.72	354.52	30	1174
충북	11	59.29	33.02	21.66	130.65	1036.73	2000.17	100	6968
충남	15	85.93	66.30	32.51	299.59	854.60	522.67	200	2010
전북	14	151.39	276.92	35.73	1102.60	910.61	651.04	250	2300
전남	22	121.02	88.04	28.97	401.04	1357.30	1366.18	178	5015
경북	23	249.08	284.71	35.85	1059.97	1556.13	1050.64	140	4259
경남	18	78.53	37.30	17.69	158.78	1228.17	1452.27	85	6200
제주	1	54.10	-	54.10	54.10	4047.00	.	4047	4047

자료: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2020);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2021)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장인수, 정찬우(2022a)에서 재인용함.

〈표 5〉 17개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금 특성(2020, 2021년)

(단위: 명, 만 원, 백만 원)

지역	인구(1만 명) 대비 출산지원금 수혜자 수 (2020년)	인구(1만 명) 대비 출산지원금 수혜자 수 (2021년)	인구(1만 명) 대비 출산지원금 수혜자 수 변화	1인당 평균 수혜 금액 (2020년)	1인당 평균 수혜 금액 (2021년)	1인당 평균 수혜 금액 변화	총지출예산 평균 (2020년)	총지출 예산평균 (2021년)	총지출 예산 평균 변화
서울	42.20	51.70	9.5	34.62	47.18	12.56	515.84	689.18	173.34
부산	26.00	33.43	7.43	61.33	63.80	2.47	198.03	286.08	88.05
대구	25.98	26.39	0.41	24.42	30.52	6.1	359.28	336.38	-22.9
인천	31.89	38.04	6.15	125.30	160.98	35.68	972.60	1155.47	182.87
광주	8.05	14.36	6.31	22.16	38.31	16.15	52.74	103.36	50.62
대전	14.43	23.78	9.35	13.94	15.00	1.06	94.62	111.00	16.38
울산	58.49	64.04	5.55	79.63	84.06	4.43	1090.40	1246.60	156.2
세종	100.84	91.76	-9.08	118.74	120.12	1.38	4156.00	4000.00	-156
경기	49.88	58.61	8.73	93.48	102.15	8.67	1576.47	1838.39	261.92
강원	95.52	107.98	12.46	85.55	93.43	7.88	379.42	495.72	116.3
충북	57.17	59.29	2.12	82.52	123.20	40.68	944.91	1036.73	91.82
충남	63.82	85.93	22.11	103.25	127.59	24.34	723.20	854.60	131.4

지역	인구(1만 명) 대비 출산지원금 수혜자 수 (2020년)	인구(1만 명) 대비 출산지원금 수혜자 수 (2021년)	인구(1만 명) 대비 출산지원금 수혜자 수 변화	1인당 평균 수혜 금액 (2020년)	1인당 평균 수혜 금액 (2021년)	1인당 평균 수혜 금액 변화	총지출 예산 평균 (2020년)	총지출 예산 평균 (2021년)	총지출 예산 평균 변화
전북	160.33	151.39	-8.94	144.19	148.61	4.42	788.93	910.61	121.68
전남	117.59	121.02	3.43	174.10	186.12	12.02	1172.66	1357.30	184.64
경북	244.47	249.08	4.61	112.24	138.70	26.46	1256.91	1556.13	299.22
경남	71.80	78.53	6.73	114.43	131.11	16.68	1089.84	1228.17	138.33
제주	60.07	54.10	-5.97	127.66	111.49	-16.17	5116.60	4047.00	-1069.6

자료: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2020);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2021)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장인수, 정찬우(2022a)에서 재인용함.

03. 향후 정책 과제

◆ 광역지자체별 정책 수혜와 관련된 통계 생산 및 관리

- 지역 인구 동태를 더욱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지표 활용과 지속적인 관측에 대한 논의 역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광역지자체의 정책 추진 여건과 수급 현황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역 출산 관련 통계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특정 정책의 혜택이 어떤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집계 수준의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심층적 통계를 생산할 필요도 있음.

◆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공공보육 관련 지원 특례 개선,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고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1조에는 보육기반의 확충과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확충,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이때 명목적 확대보다는 지역별 수요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한 실질적 확충과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 조항별 수혜 대상의 특성을 추가로 반영하여 정책 대상의 특성을 더욱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동일 인구감소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 대상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이에 따른 보육 서비스 공급률이 상이하기 때문임. 이는 보육기반과 관련된 특성에도 무관하지 않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미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큼. 이는 보육 사각지대 해소 논의와도 맞물려 있음.
 - 이러한 정책 개선 대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적극적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음.

◆ 출산지원금 재정에 대한 차등적 보조금 정책 추진

- 광역 및 기초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은 지역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함.

- 특히 장기간 젊은층 인구의 사회적 감소가 심각한 인구 위기 지역은 상대적으로 출산지원금 규모가 더 크고 이를 인구 유입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개연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의 재정적 여건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출산지원금은 거의 대부분의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국비와의 매칭 사업 형태가 아닌 지자체 자체 추진 사업의 특성을 띠고 있음.
 - 이러한 현금성 자체 사업은 특히 지역의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데다, 정책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적지 않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앞서 언급한 인구 위기 지역에 대한 추가적·차등적 보조금과 같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지역 낙후도 등을 바탕으로 특정 지역의 출산지원금 재정지출을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보조하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음(장인수, 정찬우, 2022b).²⁾
 - 사회경제적 취약 지역의 출산지원금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보조는 이들 지역의 현금성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 자체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재정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다른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2) 이는 출산지원금의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보조금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아님. 광역지자체 내에서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소위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지원금 규모가 더 큰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 논의이며, 재정 지원과 같은 중앙정부의 개입이 한편으로 출산지원금 경쟁을 자제시키는(stemming) 통로로 작동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로 이어질 여지를 고려함을 의미하는 것임.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19. 11. 6.). 범부처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II) 발표 -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 발표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l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ld1=MOSF_000000000030518&menuNo=4010100에서 2023.2.27. 인출.
- 박진경. (2019). 저출산시책, 생활권을 고려한 공동대응 필요. 저출산 시대 해법, 지역에 답이 있다! 제20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토론.
- 보건복지부. (20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1&page=1&CONT_SEQ=358238&PAR_CONT_SEQ=356091에서 2023.2.12. 인출.
-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20).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 세종: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21).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 세종: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18877호 (2022).
- 장인수. (2021). 지역 인구 변화 관측 지표로서의 합계출산율의 의미. 보건복지 Issue & Focus, 405, 1-12.
- 장인수, 정찬우. (2022a).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예정).
- 장인수, 정찬우. (2022b).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다중범위지리가중회귀모형의 적용과 함의. 보건사회연구, 42(4), 326-346.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대한민국정부.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basicPlanDetail.do?articleId=106&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에서 2023.2.1. 인출.

집필 장인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부연구위원) 문의: 044-287-8311